

현역 국회의원 4명·자치단체장·지방의원 포함 권익위, 공직자 부동산의혹 수사 의뢰

직무관련 투기의혹 65건 접수 의심 사례 21건 수사기관 이첩 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연장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28일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13건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 중이며,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직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피신고자인 4명의 국회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기 의심 사례로 신고된 국회의원의 실명이나 소속, 의혹 내용 등을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공직자 중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단기 임대소로 운영하면서 임대차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동산을 팔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도로 단속을 피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차익도 본 것이다.

또 개발 관련 공사의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 부지 토지를 지정하기 이전에 파악해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중앙부처 소속 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

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는 의혹,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이 토지 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차명 투기한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집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27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집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당초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개혁법 통과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송영길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양보 합의에 대한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법사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주자들 간의 ‘원팀 협약식’과 관련해 “적통과 지역주의 논쟁을 자제하지는 것”이라며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공격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경선 당시 문재인·정세균·손학규·김두관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쟁했

는데, 그때도 후유증이 커 통합이 좀 부족했고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고 회고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내달 미국 방문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일정이 불확실하다”며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북미관계 개선을 의회와 정당 차원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니 백신 공급 차질과 관련해선 “원래 25일 75만 도스(1회 접종분), 31일 121만 도스 해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니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일단 130만~140만(회) 분 정도를 다음 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니 백신 국내 위탁생산과 관련해선 “일단 8월에 생산이 시작된다. 병입(백신 원액을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생산이 수억 도스가 될 것”이라며 “생산되면 (이를) 국내 현지 소비로 돌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서 ‘원팀’ 배지 모양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민주싱크탱크, ‘생활기본소득·연공제 폐지’ 대선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생활기본소득 보장, 연공제 폐지,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대선 핵심 공약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핵심공약 테마’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부동산·주거안정 ▲ 탈탄소 ▲ 일자리·청년실업 ▲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 주식 시장 활성화 ▲ 생활기본소득보장 ▲ 공정사다리 복원 ▲ 정예강군·단계적 모병제 ▲ 국가수도·행정수도 완성 ▲ 청년연장·연공제 폐지·임금피크제 연동 신(新) 고용정책 ▲ 우주패권 G3(주요3

개국) 등 총 11가지 공약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생활기본소득’은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명칭이 유사해 관심이 쏠린다.

“최대공약수 젠더정책, ‘단계적 모병제’에선 휘발성이 강한 젠더 이슈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청년 연장, 연공제 폐지 등 기업·노동계의 반향이 예상되는 의제들도 있다.”

다만 연구원은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대 핵심공약’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 예비주자들, 원팀 외치고 돌아서며 ‘으르렁’

페어플레이 다짐 후 서로 “네거티브 말라” 경고

“우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 “정당당! 우리는 원팀이다.”

28일 오전 8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민주당 대권주자 6명이 일렬로 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읽어 내렸다.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겨루겠다는 다짐이었다. 45분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후보들은 짝을 지어 ‘원팀’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달아주기도 했다. 미소도 언뜻 보였지만 어색함이 역력했다. 주자들 간 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을 보다 못한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관위가 마련한 ‘원팀 협약식’에서였다. 송영길 대표는 “과거 지향적이고 소모적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당 단합을 해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퇴행적 행태”라며 “한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분은 선대위원장이 돼 함께 뛰어야 할 동지라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짧은 정책기조 발언 시간에 주자들은 ‘페어플레이’를 먼저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팀 협약식을 당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후보 한 사람으로서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낙연 전 대표도 “동지 후보들이 내놓은 모든 정책을 수용한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막내로서 ‘집에들 가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 되어 대선 승리로 질주하

자”고 했다. 매일 라디오에 나와 상대 후보를 ‘저격’하던 각 캠프 스피커들도 이날 아침엔 포문을 닫았다.

그러나 협약식이 끝나기 무섭게 행사장 밖에서는 가시 있는 말들이 오갔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을 방지할 순 없을 것”이라며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잘 가려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이후가 아니라 저는 어제부터도 얘기를 안 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소위 네거티브 공방이 상대 진영 주도로 지속됐다고 꼬집은 셈이다.

정 전 총리는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네거티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도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재정 2조 확충”...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추진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 가량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